

월요광장



문요한  
정신과 전문의

## 만일 맹자가 투표를 한다면

惻隱이다. 사람은 어질고, 의롭고, 예의 있고, 지혜로우며, 민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 중에서도 으뜸 덕목은 ‘인(仁)’이다. 그렇다면 인이란 무엇일까? 맹자는 인의 뿌리를 ‘측은지심’(惻隱之心)이라고 하였다. 즉, 타인의 아픔을 함께 느낄 줄 아는 연민과 공감의 마음이어야말로 인의 바탕이라고 한 것이다. 그렇기에 맹자는 최고의 정치를 바로 백성들의 고통에 공감할 줄 아는 즉, 인에 뿌리를 둔 왕도(王道)정치라고 보았다.

그러나 맹자가 살았던 전국시대는 어떠한가! 전쟁과 폭정으로 얼룩진 불인(不仁)의 시대였다. 성안에 피 흘린 시체가 가득하고, 들판에는 굶주린 시체가 널려 있을 정도였다. 그런 세상의 아픔에 너무나 가슴 아팠던 맹자는 천하의 제후들을 만나며 왕도정치를 설교하고 또 설교했다. 그 중에는 제(齊)나라의 선왕(宣王)도 있었다. 맹자를 만난 선왕은 도대체 왕도정치가 무엇인냐고 묻는다. 이에 맹자는 주(周)나라 문왕(文王)을 예로 들어 이렇게 대답한다.

“늙고 아내 없는 사람을 ‘홀아비’(鰥)라 하고, 늙고 남편이 없는 사람을 ‘과부’(寡)라 하고, 늙고 자식이 없는 사람을 ‘외로운 사람’(獨)이라 하고, 그리고 아내가 없는 사람을 ‘고아’(孤)라 하는데,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궁핍한 백성들로서 하소연할 데가 없는 사람들이니, 문왕은 선정을 펼치고 인을 베풀

시도 반드시 제일 먼저 이들을 돌보았던 것입니다.”

맹자의 대답은 거침이 없고 분명하다. 어디에도 의지할 곳 없고, 가장 고통받는 이들을 먼저 위하는 것이 왕도의 가장 중요한 기준임을 밝혔다. 영토 확장에 여념이 없는 제후들을 면전에서 꾸짖은 것이다. 심지어 불인(不仁)한 군주는 쫓아내야 한다는 역성혁명을 주장하기도 했다. 그런 의미에서 맹자가 이야기하는 인(仁)은 박애(博愛)가 아니라 선한 사람을 사랑하고 악한 사람을 미워하는 의(義)에 바탕을 둔 사랑이다.

그런 맹자를 제후들이 좋아할 리가 없었다. 그를 받아주는 제후는 당대에 아무도 없었다. 맹자가 이야기하는 왕도정치가 너무 이상적인 것이었을까? 그렇지도 모른다. 그러나 맹자는 인(仁)이란 덕목 이전에 인간의 본능이라고 이야기했다. 즉 인간은 남의 고통을 차마 외면하지 못하는 본성을 타고났기에 당시에는 구현되지 못하더라도 점점 그런 사회가 되어갈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엄맞다. 인(仁)은 본성이다.

신생아실 아이들이만 보더라도 한 아이가 울면 연달아 온다. 그런데 정작 아이 자신은 울음소리를 녹음해서 들려주면 울지 않는다. 즉, 신생아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울음에는 울지 않고 다른 아이의 울음에만 반응하는 것이다. 이를 ‘신생아성 반응 울음’이라고 하는데 이는 인간이 타인의 고통

통에 대해 반응하는 ‘공감’ 기능이 선천적으로 내재되어 있음을 말해 준다. 이는 뇌 영상으로도 확인해 볼 수 있다. 다른 사람이 칼에 손가락이 베어 아파하는 장면을 보면 이를 바라본 사람의 뇌에서도 통증과 연관된 대장회(Cingulate Gyrus) 영역이 활성화되어 아픔을 느끼는 것이다. 이는 교육 이전에 내재된 본성이며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생물학적 실체를 가지고 있다. 타인의 고통을 마치 자신의 고통처럼 느끼는 거울뉴런이 가장 잘 배선되어 있는 생명체가 인간인 것이다.

인간은 뱀속까지 사회적이다. 인(仁)이 있기 때문이다. 개인의 으뜸 덕목이 ‘인’(仁)이라면, 국가의 으뜸 덕목 또한 ‘인’(仁)이다. 결국 격이 높은 사람이란 이웃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사람이며, 격이 높은 국가란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이로부터 보살피는 나라이다. 박근혜 정권의 몰락은 바로 인의 결핍 때문이다. ‘무인불립’(無仁不立) 즉, ‘인’이 없으면 인간관계와 국가는 설 수 없는 법이다.

이제 19대 대통령 선거가 불과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후보마다 모두 자신이 적임자라고 이야기한다. 누구를 뽑아야 할까? 맹자를 읽다가 문득 그런 상상을 해 본다. ‘맹자가 만일 투표를 하게 된다면 누구를 뽑을까?’ 아마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의 아픔을 공감할 줄 알고 이를 돌볼 줄 아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먼저 살펴보지 않을까?

법조칼럼



곽중욱  
광주시검 검사

##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미혼의 남매인 피의자들이 아기를 키우고 싶은 호기심에 어떤 친모로부터 잠시 아기를 받아 키우다가 돌려준 것에 불과하여 혐의가 없다’는 내용이었다.

기록을 한 번 훑어보고, 미심쩍은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기록에 편철된 주민등록등본에는 노부모와 미혼 남매로 구성된 가정에서는 있을 수 없는 어떤 ‘신생아’가 출생신고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 때부터 고민이 빠졌다.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저 아이는 누구의 아이란 말인가.’ 내 상식 안에서 온갖 경우의 수를 다 동원해 봐도 답이 나오질 않았다.

결국 제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 담당 경찰관에게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신생아는 도대체 누구의 아이인지, 피의자들이 잠시 돌봐준 아이의 부모는 누구인지’ 등을 추가 수사 지휘했다. 재수사 결과는 당혹스러웠다. 피의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전국 각지에서 신생

아 5명을 매수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더 놀라운 것은 그 중 어떤 신생아들은 주민등록번호도 없이 예방접종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채 키워지고 있었다는 점이다.

친모들이 아기들을 매도한 사정을 들어보니, 뜻하지 않게 생긴 아기를 키울 여력이 되지 않자 인터넷을 통해 피의자들에게 아기를 매도한 것이었다. 그 사정이 참 딱하면서도, 산부인과에서부터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채 엄마에 의해 팔려 간 아이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했다.

결국 신생아들을 매수한 주범은 구속되고 관련자들이 모두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다. 수사 외에도 해결해야 할 일이 많았다. 아이들의 출생신고가 모두 허위였기 때문에 수사대상인 친모의 모정에 호소하여 출생신고를 시키고, 아이들이 그동안 받지 못한 국가 필수 예방접종을 해주는 것이었다.

수사과정에서 세상 아동학대 사건은

국가기관의 처벌도 중요하지만 미래의 주역인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웃의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이 사건에서도 이웃의 제보가 없었다면, 그 아기들은 지금도 세상이 그 존재를 알지 못했을 것이다.

보건복지부 산하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의 울음소리, 비명, 신음소리가 계속되는 경우, 뚜렷한 이유 없이 지각이나 결석이 잦은 경우’ 등은 아동학대의 한 징후이므로 적극적인 신고를 독려하고 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다. 아이 한 명을 우리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으로 키워내는 것이 어렵다는 뜻임과 동시에 부모는 물론 주변 이웃의 따뜻한 관심과 애정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우리 동네 모든 아이를 내 아이처럼 소중한 존재라 여기고 관심과 사랑을 기울일 때 아동학대 범죄는 사라지리라 믿는다.

기 고



김진배  
광주시 일자리정책담당

## 청년을 버린 나라, 청년을 선택한 국가

제가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1998년 IMF경제위기를 겪은 후 경제가 호전되는 듯하였으나 2008년 다시 외환위기를 겪었고, 그 후 지속된 저성장 기조 속에서 실업문제는 가장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청년실업률이 9%대를 웃돌고 있어서 문제가 더 심각하다. 일자리가 없다는 것은 의식주를 해결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일자리가 있어도 좋은 직장(Decent Job)이 아니면 결혼 등 정상적인 사회생활 유지가 어렵다는 것은 현실이다. 결혼을 못하니 출산은 아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듯 청년일자리 부족은 국가와 사회의 구성기초인 가정의 해체를 초래하고 결국은 국가 존립의 간간을 뒤흔드는 매우 중대한 문제다.

그리스와 아이슬란드는 저금리 시대 천문학적인 돈을 끌어와 호황을 누렸던 국가였다. 하지만, 2008년 세계금융위기가 닥치자 경제는 내리막을 걷게 되었고 나란히 위기를 맞이하게 됐다. 위기상황에서 두 국가는 대조되는 청년정책(박근혜, ‘대담한 경제’)을 폈다. 그리스는 파산

위기에 놓인 은행과 대기업을 살리기 위해 복지 분야 지출을 줄이고 젊은 세대를 위한 육아와 교육예산을 삭감하는 정책을 펼쳤는데, 국가채무는 오히려 증가하고 청년세대는 부실기업과 부실은행의 빚을 짊어지게 되었다.

아이슬란드도 처음에는 공적자금을 통한 부실은행과 기업에 대한 투자를 계획했다. 하지만, 아이슬란드 국민은 이에 반대하며 냄비와 솔을 두드리며 시위를 벌였다. 이른바 ‘주방용품 혁명’이다.

국민 저항에 직면한 아이슬란드는 공적자금 투입을 철회하고, 복지정책 강화와 청년들을 위한 적극적인 노동정책 시행 등 그리스와 상반된 조치들을 취했다. 그 결과 경제위기를 극복했다. 두 국가의 사례에서 교훈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청년들이 국가 경제성장의 중요한 성장동력이라는 점이다.

광주시는 올해 지역경제 및 산업여건에 대응하는 체계적이고 실현 가능한 고용정책을 수립하여 공공부문에서 2만 5000여명, 민간부문과 직업능력 개발 훈련 등을 통해 3000여명 등 모두 2만8000여명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잡았다. 이에

따르면 고용률은 58.5%까지 올라간다.

특히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창업지원, 직접일자리, 인력양성, 고용서비스 등 4개 분야 31개 사업에 395억원을 투입하여 2500여명의 청년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신규 사업으로는 광주형 청년구직활동 지원사업인 ‘청년드림’, 청년창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광주청년창업펀드 조성(100억원)이 포함돼 있다.

청년세대가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갖추고 있더라도 사회진출에 실패하면 경제성장동력이 될 수 없다. 국가나 지자체에서 아무리 많은 정책을 시행하고 투자해도 청년들이 의지가 없으면 무용지물이다.

국가는 지속가능한 청년의 길을 열어주어야하며, 지자체는 지역과 청년이 공생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사회구성원도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을 갖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각자의 영역에서 연대하고 협력하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 청년들도 스스로 국가나 지자체의 중요한 지원임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자기계발과 사회참여를 통해 현재의 경제위기 극복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 미래 최고의 자원은 청년이다.

社說

## 아픈 수학여행 끝내고 물에 올라온 세월호

“세월호 속에서 엄마를 얼마나 찾았을까요.” “엄마 딸 서우, 꿈에라도 한번 와 줬으면 좋겠어.” “민지야! 엄마가 한번 안아 주고 싶다.”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들의 글이다.

“사대 독자 우리 아이, 살려 달라 하지 않아요. 아이만 찾을 수 있다면, 양지바른 곳에 묻어 주고, 평생 봉사하고 살 거예요.” “축구를 좋아했던 영인이는 축구화를 사달라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못 사 줬던 축구화를 사서 팽목항에 두고 영인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월호가 특수 운반장비 모듈 트랜스포터에 실린 채 드디어 물에 올라왔다. 해수부는 어제 새벽 최종 테스트 결과, 모듈 트랜스포터 600대가 세월호를 이송하는 데 이상이 없다고 판단하고, 오전 9시부터 세월호를 모듈 트랜스포터에 실어 반잠수선 끝으로 이동시켰다. 그리고 오후 1시쯤부터 육지로 이송하기 시작했다.

목포 산항 부두에 올라온 세월호는

향후 이뤄질 수색 작업이 좀 더 쉽도록 객실부가 부두 안쪽을 바라보게끔 거치됐다. 이어 선체 세척과 방역 작업, 안정도 검사를 거쳐 미수습자 9명을 찾기 위한 선내 수색이 시작된다.

세월호 인양과 육상 거지를 누구보다도 기다린 사람들은 미수습자 가족들일 것이다. 이에 따라 세월호 육상 거치와 함께 침몰 지역의 수중 수색 작업도 시작됐다. 잠수사 30여 명이 2인 1조로 투입되는데, 선체 주변에 설치한 유실 방지 펜스 내부를 일반 구역 40개, 특별 구역 2개로 나눠서 앞으로 두 달 동안 4단계에 걸쳐 정밀 수색하게 된다.

세월호가 물로 올라오는 마지막 여정을 지켜보던 미수습자 가족들은 보고 싶은 지식과 가족들을 다시 품어 안을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안도하면서도 육지에 첫발을 디딘 세월호를 보며 또다시 오열하기도 했다. 이제라도 이들의 피맺힌 한이 풀리고 ‘3년 전 진실’도 함께 드러나기를 온 국민과 함께 기원한다.

## 전남 지역 인구 감소 브레이크가 없다

전남 지역 인구 감소세가 심상치 않다. 주민등록상 전남의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190만 명 선 아래로 내려갔다. 전남 인구는 3월말 기준으로 189만944명으로 전남에 비해 1356명이 감소하면서 190만 명 선이 붕괴됐다. 2010년 6월 190만 명대로 추락한 후 6년9개월 만에 10만 명이 줄어 180만 명대로 접어들었다.

전남 인구는 한때 400만 명을 넘길 정도로 많았다. 광주시와 분리되기 전이지만 전남 인구는 1966년 405만461명으로 정점을 찍었다. 농업이 주력 산업의 자리를 차지하던 시절로 ‘농도 전남’의 위력이 인구에 그대로 반영됐다. 하지만 산업화와 정보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이농 현상이 심화됐고 이는 인구 감소로 이어졌다. 현재 광주시 인구와 합하더라도 350만 명이 안 된다.

심각한 점은 전남 인구 감소가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돼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데 있다. 전입자보다 전출자가 많고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으니 인구가 줄어든 수밖에 없다.

전남은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다. 2004년 8월 첫 집입이후 사회돼 지금은 21.1%로 65세 이상이 40만 명을 넘어섰다. 그만큼 사망자가 많고 여기에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타 지역으로 떠나다 보니 귀농·귀촌으로 는 인구 감소세를 막을 수 없다.

전남도가 민선 6기 들어 ‘청년들이 돌아오는 전남’을 내걸고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별다른 효과 없다. 인구 감소를 줄이는 근본 대책은 결국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뿐이다. 대기업 유치가 가장 빠른 길이지만 나주혁신도시 공기업의 지역내 재 채용 비율 상향 등 당장 가능한 일도 있다. 대권 후보들에게 구체적인 공약으로 제시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無 等 鼓**

프랑스 제정시절 나폴레옹을 신처럼 숭배했던 ‘니콜라 소뱅’이라는 군인이 있었다. 수많은 전투에 참전해 수십 차례의 부상을 입었고, 결국 부상이 심해 제대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나폴레옹을 죽도록 찬양했다.

이 이야기가 영국 연출가 코나르에게 알려졌고, 코나르는 작품 ‘삼색모표’(1831년)에 소뱅을 등장시켰다. 작품이 성공하면서 주인공 소뱅의 이름이 따 명목적·광신적 애국주의를 뜻하는 ‘소비니즘’(Chauvinism)이라는 단어가 생겼다.

이후 소비니즘은 국가 이익을 최우선시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극단적인 국가주의나 민족주의의 의미를 띠게 됐다. 1차 세계대전에 패한 독일은 패전에 따른 전쟁 배상금 등 국제조약 이행 대신 ‘위대한 게르만 민족’을 표방한 히틀러를 총통(1934년)으로 선출한다. 히틀러의 나치즘은 소비니즘의 표본 격이다. 자국민만의 우수성을 강조했던 나치즘은 600만 명에 이르는 유대인 학살의 만행을 초래한다. 여기에 일본 메이지 유신 후의 집락주의, 이탈리아 파시즘 등도 대표적인 예다. 모두 군사적인 팽창과 학살이

라는 인류 최악의 범죄를 저질렀다.

국가로 의미가 한정됐던 소비니즘은 점차 개인이 속한 사회집단에 대한 맹목적 태도, 즉 타 집단에 대한 배척·적대감을 뜻하는 의미까지 확장됐다. 최근 우리 사례로는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파면 선고 이후, 현재와 재판 결과를 부정하는 ‘태극기 집회’를 들 수 있다.

을 들어 소비니즘의 ‘끝판왕’은 뭤니 뭤니 해도 중국의 ‘사드 소비니즘’일 것이다.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은 자국 내 롯데마

트의 영업을 제한하더니, 반한 감정에 어린 학생들까지 이용하고 있다. 한국 제품 불매 운동이 계속되면서 현대차와 기아차 중국 매장에도 손님이 끊겼다고 한다.

소비니즘은 역사상 단 한 차례도 성공한 적이 없다. 단기간에는 그 목적을 달성한 듯 보일지라도 중국에는 스스로 해체하거나 멸망의 길로 접어들었다. 중국의 소비니즘이 그치지 두렵지 않은 이유이다. 다만 우리 나름의 극복 방안이 신속히 마련된다면 전제하에서도

/채희총 사회2부장 chae@

<b>光 州 日 報</b>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b>金汝松</b>		주필 <b>李洪載</b> 편집국장 <b>程厚植</b>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경영지원국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7-9500)	기획관리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2-0195)
정 치 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 220-0664	다 지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사 회 2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b>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b>			

독자투고·기고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